



의안번호	제 2018 - 19호
보 고 연 월 일	2018. 7. 23. (제88차 정기회의)

보  
고  
안  
건

## 전문위원 업무보고

제 출 자	수석전문위원
-------	--------





# 목 차

<b>I. 제118차 전체회의</b> .....	<b>1</b>
1. 일시.장소 .....	1
2. 참석자(11명) .....	1
3. 주요 안건 .....	1
<b>II. 공갈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검토</b> .....	<b>2</b>
1. 유형 분류/형량범위 .....	2
2. 양형인자 .....	2
3. 집행유예 기준 .....	2
<b>III.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검토</b> .....	<b>3</b>
1. 유형 분류/형량범위 .....	3
2. 양형인자 .....	7
3. 집행유예 기준 .....	10
<b>IV. 권리행사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검토</b> .....	<b>12</b>
1. 유형분류 .....	12
2. 형량범위 .....	12
3. 양형인자 .....	13
4. 집행유예 기준 .....	16
<b>V. 손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검토</b> .....	<b>17</b>
1. 유형분류 .....	17
2. 형량범위 .....	17
3. 양형인자/집행유예 기준 .....	17

---

## VI.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검토 .....	18
1. 유형분류 .....	18
2. 형량범위 .....	18
3. 양형인자 .....	19
4. 집행유예 기준 .....	22
VII. 향후 일정 .....	22

### 【별첨】

- 전휴재, “공갈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의견 검토”
- 송오섭,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의견조회 검토”
- 전휴재, “권리행사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의견 검토”
- 송오섭, “손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의견조회 검토”
- 전휴재,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의견 검토”
- 이용, 차호동, “공갈범죄 등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





## I. 제118차 전체회의

### 1. 일시 · 장소

- 일시 : 2018. 7. 9.(월) 15:00 ~ 18:4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2. 참석자(전문위원 11명)

- 수석전문위원, 강수진, 김혜경, 김희연, 범현, 송오섭, 이용, 전후재, 차호동, 최준혁, 한상규 전문위원(이상 가나다 순)
- 운영지원단장(간사)

### 3. 주요 안건

- 「공갈범죄」,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권리행사방해범죄」, 「손괴범죄」,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검토

## II. 공갈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검토

### 1. 유형 분류 / 형량범위

⇒ 회신 내용 없음

### 2. 양형인자

⇒ 회신 내용 없음

### 3. 집행유예 기준

#### 가. 의견조회 결과 요지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를 집행유예의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추가하거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의 예시로 추가함이 타당(법무부)

#### 나. 검토 ⇒ 수정안 유지(의견 일치)

- 양형위원회에서는 공갈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하면서 전문위원단의 검토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아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추가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음
  - 기존의 양형기준 중 양형인자에 반영되지 않은 양형요소가 집행유예 참작사유로만 반영된 사례는 찾아볼 수 없음
  - 단체의 범행이나 흉기를 휴대한 범행은 현행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대한 정의 규정 중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도 충분히 포섭 가능 → 기존 특별양형인자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의 정의 규정과 별도로 집행유예 기준에서 이에 관한 정의 규정을 새로이 정할 필요는 없음
- 제87차 양형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이미 최종 의결한 폭력범죄의 수정 양형기준에 대해서도 동일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반영하지 않기로 함

### Ⅲ.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검토

#### 1. 유형 분류 / 형량범위

##### 가. 의견조회 결과 요지

- ① 대유형1(체포·감금)의 중유형1(일반적 기준) 중 소유형1(일반체포·감금)에 법정형이 3년 이상인 특수중존속체포·감금죄와 상습중존속체포·감금죄가 포함된 점을 반영하여 가중영역 상한(현행 1년 6월, 수정안 2년)을 4년으로 상향함이 타당 (법무부)
- ② 대유형1(체포·감금)의 중유형1(일반적 기준) 중 소유형2(보복목적 체포·감금)의 가중영역 하한을 1년 4월로 상향하고(수정안: 1년), 소유형3(누범체포·감금)의 가중영역 하한 및 상한을 모두 상향함이 타당 (법무부)
- ③ 법정형이 대폭 하향된 법률 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대유형1(체포·감금)의 중유형1(일반적 기준) 중 소유형3(누범체포·감금)의 기본영역 상한은 2년 6월로, 가중영역 상한은 3년 6월로 각각 하향 조정함이 타당 (법원행정처)
- ④ 대유형3(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의 권고 형량범위를 전 영역에 걸쳐서 상향함이 타당 (법무부)

##### 나. 논의 결과

#### (1) 대유형1의 중유형1 중 소유형1의 권고 형량범위 중 가중영역 상한의 상향 여부 ⇨ 의견 불일치

##### (가) 참고 사항

- 제81차 및 제82차 양형위원회 정기회의에서는 체포·감금죄의 유형을 분류할 때 상습범과 특수군을 모두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기로 의결. 이에 따라 유형 분류가 변경되어 기존 소유형3에 포함되었던 특수중존속체포·감금죄와 상습중존속체포·감금죄가 소유형1에 포함됨
- 현행 소유형1에 대한 양형기준의 가중영역 상한은 징역 1년 6월. 제86차 양형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인 특수중존속체포·감금죄와 상습중존속체포·감금죄가 소유형1에 포함된 점을 감안하여 가중영역 상한을 징역 2년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의결함

(나) 전문위원단 의견1)

① 다수 의견(6인) : 수정안 유지

- 양형기준상 가중영역의 상한이 법정형의 하한과 같거나 하한보다 낮은 경우가 있었음
  - ex1) 현행 양형기준의 소유형3에 해당하는 누범특수존속체포·감금의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의 개정 전 법정형은 징역 5년 이상이었으나 양형기준 가중영역의 상한은 징역 4년
  - ex2) 수정 전 폭력범죄 양형기준 중 대유형3(폭행범죄)의 소유형6과 대유형4(협박범죄)의 소유형4에는 법률 개정 전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인 범죄가 포함(상습특수존속폭행, 누범특수존속폭행, 상습특수존속협박, 누범특수존속협박)되었으나 가중영역 상한은 각각 징역 2년 4월과 징역 2년
- 제6기 양형위원회에서 유형 분류를 하면서 이러한 사정에 대한 인식 아래 이미 논의가 있었음(제82차 양형위원회 정기회의) ⇨ ‘특수중존속체포·감금, 상습중존속체포·감금의 법정형이 상당하긴 하나, 양형기준이 적용된 사례가 없으므로 별도로 유형 분류할 실익이 없으며, 기존에도 별도로 유형 분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도 유형 분류를 하지 않고, 소유형1에 포함하기로 함
- 제86차 양형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권고 형량범위를 수정할 당시 이 부분에 대하여 논의한 후에 당초 전문위원단의 일치된 의견으로 제시된 가중영역의 상한 징역 1년 6월(현행)을 2년으로 상향하기로 의결함 ⇨ 그럼에도 양형기준이 전혀 적용된 사례가 없는 범죄를 반영하여 가중영역의 상한에 대한 서술식 양형기준을 다시 추가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고 실익도 없음

---

1) 전문위원들이 전문위원 전체회의 후 개별적인 추가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의견 제시함.

② 소수 의견(4인) : 서술식 기준 추가하여 해당 범죄의 가중영역 상한을 1.5배 상향

- 처단형을 권고하는 양형기준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가중영역의 상한 자체를 법정형의 하한보다 더 낮게 설정하는 것은 법관으로 하여금 양형기준을 준수하려면 처단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양형인자와 무관하게 반드시 감경을 하라는 셈이 되므로 타당하지 않음
- 현 시점에서 유형 분류 방안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인 범죄에 대해서만 따로 적용되는 서술식 기준을 추가함으로써 법정형과 양형기준의 조화를 모색
- 서술식 기준을 통하여 가중영역의 상한을 1.5배 가중할 경우 외형상 법정형 하한과 동일한 것으로 보여 여전히 미흡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존속인 피해자', '상습범인 경우' 등과 같이 특별가중인자가 복수로 존재하여 형량범위의 특별조정 원칙에 따른 1/2 가중이 이루어질 경우 결과적으로 징역 4년 6개월이 가중영역의 상한으로 됨 ⇨ 서술식 기준을 통한 1.5배 가중만으로도 법정형 하한보다 더 높은 형량범위를 권고하는 것이 가능하여 양형기준과 법정형의 괴리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음
- 소유형3의 가중영역 상한을 4년으로 정한 현행 양형기준은 법정형이 징역 5년 이상인 누범특수존속체포·감금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것. 더욱이 이번 양형기준 수정으로 상습과 특수요소 모두 특별가중인자로 반영되므로, 만약 소유형3의 가중영역 상한과 동일하게 정할 경우 형량범위의 특별조정 원칙까지 적용되면 실제로 상한을 6년으로 높이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함
- 서술식 기준안

특수중존속체포·감금죄, 상습중존속체포·감금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중영역의 형량범위 상한을 1.5배 가중
--

③ 소수 의견(2인) : 서술식 기준 추가하여 해당 범죄의 가중영역 상한을  
2배 상황

- 가중영역의 하한(2년)이 가장 중한 범죄의 하한(3년 이상)에도 미치지 못하여 소유형1에 포섭되는 범죄의 법정형에 비추어 현저히 균형을 잃었음
- 가중영역의 상한은 특별양형인자가 더 많은 경우이므로 가장 무거운 범죄의 법정형의 하한 보다 더 높아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3년 6월을 초과하는 형량을 가중구간 하한으로 정함이 타당함
- 상습중존속체포·감금과 특수중존속체포·감금은 원래 소유형3인 ‘상습·누범·특수체포감금’ 범죄군에 속해 있었고, 그 법정형의 변경도 없었으며, 종전의 형량범위를 변경할 사유가 없으므로 종전 형량범위의 상한이자 수정안의 소유형3의 가중영역 상한인 4년을 유지함이 상당함. 상한 형량에 상응하는 형량을 정하기 위하여 서술형 양형기준에 의할 때 2배 가중하는 것이 타당함
- 서술식 기준안

특수중존속체포·감금죄, 상습중존속체포·감금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중영역의 형량범위 상한을 2배 가중
---

(2) 나머지 의견조치 결과 ⇨ **수정안 유지 (의견 일치)**

- 형량범위에 관한 관계기관의 나머지 의견조치 결과는 이미 양형기준 수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검토되어 양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음
- 수정안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논거나 이유가 발견되지 않음

## 2. 양형인자

### 가. 의견조회 결과 요지

- ① 대유형1(체포·감금)의 특별가중인자(모든 소유형에 공통됨) 중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와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를 통합하여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하거나 가혹한 행위가 있는 경우’로 수정함이 타당 (법원행정처)
- ② 대유형3(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의 양형인자 중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특별감경인자에서 일반감경인자로 변경함이 타당 (법무부)
- ③ ‘농아자’를 특별감경인자에서 제외함이 타당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④ ‘내부고발’을 특별감경인자에서 제외함이 타당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나. 논의 결과

- (1) 대유형1의 특별가중인자인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와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를 통합하여 규정할지 여부 ⇨ **통합하지 않되 문구 수정(의견 일치)**

- 현행 특별가중인자인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는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한 행위를 의미함

#### 형법 제277조 제1항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학설상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한 행위는 ‘생명·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일체의 유형적·무형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됨. 그러나 체포·감금의 수단으로서 폭행·협박을 가하거나 체포·감금을 계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의 폭행·협박은 가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주석형법 각칙 4(제5판), 277쪽]
-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는 체포감금에 더해진 정신적·육체적 고통행위를 의미
- 한편, 현행 특별가중인자인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 대한 양형기준상 정의 규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양형기준 책자 438쪽)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상당한 장시간 동안 피해자를 체포·감금한 경우
  - 체포·감금 과정에서의 유형력, 위계, 기망, 협박 등의 정도가 극히 중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는 형법 제277조 제1항의 중체포·감금범죄나 그 가중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로 기소되어 유죄로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양형인자로서, 체포·감금죄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즉 그 자체의 경중은 별론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개입되는 행위들이 피해자에게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를 의미함
- 결국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와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는 규율의 대상을 달리하고,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는 특별감경인자인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대응되므로 양자를 ‘또는’의 형식을 취하여 같은 항목에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사례의 적용]**

- ① 감금을 위하여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가 중한 경우
  - 형법 제27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일반감금죄 적용
  - 특별가중인자로서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 해당하나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 ② 감금을 위하여 행사한 물리력을 일반적이었지만, 감금 기수 이후 잠을 재우지 않거나 음식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 형법 제27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중감금죄 적용
  - 특별가중인자로서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나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 ③ 감금을 위하여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가 중하였고, 감금 기수 이후 잠을 재우지 않거나 음식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 형법 제27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중감금죄 적용

- 특별가중인자로서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와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 모두 해당

- 다만 현행 양형인자의 표현 문구나 정의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와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가 구별되는 개념인지 다소 모호하고, 이로 인하여 적용 과정에서 자칫 이중평가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 있음
- 따라서 현행과 같이 별도의 항목에서 각각 규정하되,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를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 문구를 수정함으로써 그 의미를 분명하게 하여 양형기준의 적용 과정에서 이중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함 ☞ 집행유예 참작 사유도 동일하게 수정

## (2) 양형인자에 대한 나머지 의견조치 결과 ⇨ **수정안 유지(의견 일치)**

### ① 아동학대중상해·치사의 양형인자 중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일반감경인자로 수정할지 여부

- 제84차 양형위원회 정기회의에서는 양형인자 중 처벌불원 등과 관련하여 현행 양형기준을 유지하되, 공청회, 심포지엄 등을 통하여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전체적인 관점에서 양형기준의 수정 여부를 논의하기로 의결함

### ② ‘농아자’를 특별감경인자에서 제외할지 여부

- 피고인이 농아자인 경우 형의 필요적 감경사유에 해당함(형법 11조). 따라서 현행과 같이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함이 타당함

### ③ ‘내부고발’을 특별감경인자에서 제외할지 여부

- 외부에서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의 특성상 ‘내부고발’을 자수에 준하여 취급할 형사정책적 필요가 있음
- 최초 양형기준 설정 시 이러한 필요성이 반영되어 특별감경인자에 포함되었고, 이를 수정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음

### 3. 집행유예 기준

#### 가. 의견조회 결과 요지

- ①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중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와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또는 사망 내지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통합하여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하거나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또는 사망 내지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로 수정함이 타당 (법원행정처)
- ②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을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와 통합하여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추가함이 타당 (법무부)
- ③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중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과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경우’를 제외함이 타당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④ 유기·학대 유형에서 집행유예 기준의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중 존속인 피해자를 존·비속인 피해자로 변경함이 타당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나. 논의 결과 ⇨ 의견 일치

- (1)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와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를 통합할지 여부 ⇨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를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 문구 수정

- 양형인자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에 대한 검토 중 해당 부분에서 보고를 드린 내용과 같은 쟁점
- 전문위원단의 검토 결과는 동일함

- (2) 집행유예 참작사유에 대한 나머지 의견조회 결과 ⇨ 수정안 유지

- ①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인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을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수정할지 여부

- ‘Ⅱ. 공갈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검토’의 해당 부분에서 보고를 드린 내용과 같은 쟁점
- 전문위원단의 검토 결과는 동일함

- ②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인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과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을 제외할지 여부

-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경우는 재범의 위험성 측면에서 이를 일

반 긍정적 참작사유로 할 필요성이 인정됨. 다른 범죄군에 대한 집행유예 기준에서도 동일한 참작사유 포함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경우는 현행 양형기준상 집행유예의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로 일관되게 고려된 요소임. 피고인과 피해자가 분리되어야 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부양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안에 따라 적어도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로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 있음

**③ 유기·학대 유형의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인 ‘존속인 피해자’를 ‘존·비속인 피해자’로 변경할지 여부**

- 존속인 피해자를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정한 것은 유기·학대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인 존속유기·학대죄를 반영한 것
- 비속에 대한 유기·학대 범행까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삼을 경우 대부분의 유기·학대범죄에 있어서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가 인정되는 결과가 되어 양형기준이 구체적 타당성을 결여한 불합리한 양형을 권고하게 될 우려 있음

**4. 기타 ⇨ 오기 정정(의견 일치)**

- 의견조회를 위한 수정안에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이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로 잘못 기재됨.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로 정정(법원행정처)



## IV. 권리행사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치 결과 검토

### 1. 유형 분류

#### 가. 의견조치 결과 요지

대유형 1(일반강요)의 소유형3과 관련하여 폭력행위처벌법의 규정, 법정형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누범특수강요를 별개의 세부 항목으로 분류하여 양형기준을 정함이 타당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나. 논의 결과 ⇨ 수정안 유지(의견 일치)

- 누범특수강요는 대유형1의 소유형 3 ‘누범강요’ 범죄군에 해당하고 별도의 소유형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음
- 그러나 특별가중인자인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가 적용되어 누범강요보다 권고형량범위가 높아짐. 따라서 누범특수강요를 별도의 소유형으로 구분할 필요 없음

#### 다. 주무 전문위원의 추가 검토 내용 ⇨ 의견 일치

- 강요죄의 특별가중인자인 ‘특수강요가 적용되는 경우’에 대한 정의가 현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의 특수강요가 적용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로 되어 있음(양형기준책자 466쪽)
-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이 2016. 1. 6. 삭제되었으므로 이를 ‘형법 제324조 제2항의 특수강요가 적용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로 변경하여야 함

### 2. 형량범위

⇨ 회신 내용 없음

### 3. 양형인자

#### 가. 의견조회 결과 요지

- ① 대유형1(강요)의 특별가중인자인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를 소유형2 특수강요에도 적용함이 타당 (법무부)
- ② 대유형1(강요)의 특별가중인자인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 적용범위에서 소유형2(중특수강요) 제외함이 타당 (법원행정처)
- ③ 대유형1(강요)의 특별가중인자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의 정의 규정을 수정함이 타당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④ 대유형1(강요)의 특별감경인자인 ‘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를 삭제함이 타당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⑤ 대유형1(강요)의 특별가중인자인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의 정의 규정에서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범행에 나아간 경우’를 삭제함이 타당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⑥ 대유형2(권리행사방해등)의 특별감경인자인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의 정의 규정에서 ‘은닉한 재산의 집행가능성 및 담보가치가 낮은 경우와 같이 은닉 등 행위 또는 허위채무 부담행위가 채권자가 실제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금액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3유형)’를 제외함이 타당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나. 논의 결과 ⇨ ①~⑤항은 수정안 유지, ⑥항은 수정안 유지하  
되 일부 문구 수정(의견 일치)

(1) 대유형1의 특별가중인자인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를 특수강요에도 적용할지 여부

- 수정안 확정 당시 양형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은 논거를 바탕으로 충분  
한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린 사항이고, 이를 변경할 특별한 사유  
가 없음
  - 종래 소유형3에 상습·누범·특수강요가 포함되었으나 법률 개정  
에 따른 유형 분류 변경으로 특수강요는 소유형2에, 누범강요는  
소유형3으로 분류되고, 상습강요는 삭제됨. 수정안은 이러한 변경  
에 맞추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의 적용범  
위 대상을 수정한 것
  - 폭력범죄나 체포·감금범죄에서도 위 양형인자를 상습·누범·특  
수군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음

(2) 대유형1의 특별가중인자인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의 적용

### 범위에서 소유형2(중·특수강요)를 제외할지 여부

- 특수강요(형법 324조 1항)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협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를, 중강요(형법 326조)는 강요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협을 발생'하게 한 경우를 구성요건으로 함
- 즉 특수강요는 다수인의 범죄나 흉기 사용 등 행위요소를 이유로, 중강요는 가중적인 결과 발생을 이유로 일반 강요죄보다 더 높은 형을 정함. 위와 같은 구성요건 요소들이 폭행·협박의 정도, 강요된 행위의 내용 및 시간적 계속성을 감안한 피해 정도 등 양형기준상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의 정의요소와 반드시 중복된다고 보기 어려움
- 기존 양형기준에서도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는 특수강요와 중강요에 모두 적용된 사정 고려하면 수정의 필요성이 크지 않음

### (3) 대유형1의 특별가중인자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의 정의 규정 수정 여부

- 현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의 정의 규정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로 되어 있음(양형기준 책자 467쪽)
- '신체 또는 정신장애, 연령 등'으로 정의되어 있어 신체장애, 정신장애, 연령 이외에도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한 상태였다고 평가되면 적용 가능함
-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는데도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하였다고 하여 이를 가중요소로 삼는다면 책임주의 원칙에 반할 수 있음

### (4) 대유형1의 특별감경인자인 '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를 삭제할지 여부

- 폭행·협박의 정도는 피해자의 연령, 성별, 장애 여부 등 피해자의 여러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됨
- 특별가중인자로서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가 있는 것과의 균형상 '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는 데에는 신중하여야 함

**(5) 대유형1의 특별감경인자인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중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범행에 나아간 경우'를 삭제할지 여부**

- 권리행사 수단으로 강요범행에 나아간 경우라 하더라도 위법행위로서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함
- 그러나 범행 동기의 측면에서 권리행사의 수단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강요범행과 구별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감경요소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함

**(6) 대유형2의 특별감경인자인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의 정의 규정에서 일부 요소 제외 여부**

- 강제집행면탈죄(형법 327조)는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위태범이므로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그러나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여부와는 별도로 은닉재산 가액이 낮아 실질적인 피해가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할 필요 있음
- 추상적 위험범에 속하는 방화범죄에서도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정하고 있음
- 다만 위 감경요소는 소유형3 '중권리행사방해죄'가 아닌 소유형4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것임. 따라서 정의규정 중 위 감경요소를 '4유형'에 적용하는 것으로 문구를 수정할 필요 있음
- 종전 권리행사방해죄 양형기준 제정 당시 회의록을 보면, 최초 소유형3을 강제집행면탈죄로 하였으나 이후 소유형3으로 중권리행사방해죄를 신설하면서 강제집행면탈죄가 소유형4로 되었음. 이러한 사정이 양형인자 정의 규정에 미쳐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은닉한 재산의 집행가능성 및 담보가치가 낮은 경우와 같이 은닉 등 행위 또는 허위채무 부담행위가 채권자가 실제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금액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4유형)'으로 문구를 수정(즉 괄호 부분을 3유형 → 4유형)

### 3. 집행유예 기준

#### 가. 의견조회 결과 요지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을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추가(법무부)

#### 나. 논의 결과 ⇨ 수정안 유지(의견 일치)

- 'Ⅱ. 공갈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검토'의 해당 부분에서 이미 보고를 드린 내용과 같은 쟁점
- 전문위원단의 검토 결과는 동일함

## V. 손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검토

### 1. 유형 분류

⇒ 회신 내용 없음

### 2. 형량범위

#### 가. 의견조회 결과 요지

1. 대유형1(일반적 기준) 중 소유형2(공익건조물과괴)의 권고 형량범위의 가중영역을 현행 '1년 6월~4년' 에서 '1년~3년' 으로 하향 조정해야 함 (법원행정처)
2. 형량구간의 과도한 중첩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유형2(누범·특수 손괴) 중 소유형1 (누범·특수 손괴등)의 가중영역 하한을 8월이 아닌 10월로 설정하고, 소유형2(누범특수손괴) 기본영역의 하한은 법정형의 하한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10월이 아닌 1년으로 설정함이 상당함 (법무부)

#### 나. 논의 결과 ⇒ 수정안 유지(의견 일치)

-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에서 제시된 의견은 이미 양형기준 수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검토됨
- 양형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단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수정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변경할 만한 새로운 논거나 이유가 발견되지 않음

### 3. 양형인자 / 집행유예 기준

⇒ 회신 내용 없음

## VI.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검토

### 1. 유형 분류

#### 가. 의견조회 결과 요지

대유형2(약취·유인·인신매매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의 소유형3(피약취·유인 13세 미만 미성년자 상해 등/인질상해·치상/인질강도상해·치상)을 독립적 유형으로 분류함이 타당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나. 논의 결과 ⇨ 수정안 유지(의견 일치)

- 현행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양형기준은 대유형2의 소유형3에서 피약취·유인 미성년자 상해 등과 인질상해·치상을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음. 이번 수정안에서는 여기에다가 인질강도상해·치상을 추가하기로 함
- 소유형3에 포함되는 각 범죄는 구성요건상 차이가 있으나, ① 법정형이 유사하고(피약취·유인 13세 미성년자 상해 등 : 무기 또는 5년 이상, 인질상해·치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인질강도상해·치상 : 무기 또는 7년 이상), ② 기본범죄가 약취·유인범죄로서 공통적이므로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 가능함

### 2. 형량범위

#### 가. 의견조회 결과 요지

- ① 대유형3(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재물 등을 요구·취득한 경우)의 중 소유형1(인질강요·인질강도)의 가중영역 하한을 4년으로 상향함이 타당 (법무부)
- ② 대유형1(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중 소유형1(단순 약취·유인·인신매매 등)의 감경·기본·가중영역의 하한을 각각 4월, 8월(또는 10월), 1년 6월로 하향 조정함이 타당(법원행정처)

## 나. 논의 결과 ⇨ 수정안 유지(의견 일치)

-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에서 제시된 의견은 이미 양형기준 수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검토되었고, 양형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단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수정안을 마련함
- 수정안에서 정한 형량범위를 변경할 만한 새로운 논거나 이유가 발견되지 않음

## 3. 양형인자

### 가. 의견조회 결과 요지

- ① 대유형 4(약취·유인·인신매매 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양형인자 중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와 ‘2인 이상 공동범행’은 특별가중인자 또는 일반가중인자로 포함하지 아니함이 타당 (법원행정처)
- ②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을 대유형 4(약취·유인·인신매매 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특별가중인자로 추가함이 타당 (법무부)
- ③ 특별가중인자인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를 수정하여 13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들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여 적용함이 타당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④ 대유형 4(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의 특별감경인자인 ‘양육권이 없는 부모나 친족의 범행으로서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삭제함이 타당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⑤ 대유형 4(약취·유인·인신매매 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특별가중인자인 ‘반성없음’을 삭제함이 타당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나. 논의 결과

### (1) ①항 및 ②항 ⇨ 의견 불일치

(가) 다수 의견(7인) : **현행 양형기준 유지(양형인자로 추가하지 않음)**

- 대유형 4의 소유형 1에 관해서는 치상 범죄에서 2개 이상의 특별가중인자가 있을 경우 불합리한 형의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동일한 특별가중인자를 치상 범죄에 둘 필요가 인정될 수 있음
- 그러나 소유형 2의 경우 수정안과 같이 특별가중인자를 추가하게



되면, 해당 특별가중인자가 하나라도 존재할 경우 가중영역인 '11년 이상, 무기'에 해당할 수도 있게 됨. 이는 행위반가치, 결과반가치, 법정형 등에서 유사한 범죄로 비교 대상인 강도치사나 강간치사의 경우 그러한 특별가중인자가 없다는 점에서 자칫 유사한 범죄 사이에서 권고 형량범위가 크게 차이나고 소유형2에 대해서 과도한 형량을 권고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음 ⇨ 특히 소유형2의 인질강도치사는 적용법조가 형법 제338조로서 일반 강도치사와 적용법조가 동일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라는 특별가중인자를 추가하는 경우 조직적 형태의 범행에 있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와는 달리 그 가담 형태의 경중을 묻지 않고 특별가중인자로 적용되게 됨. 가중영역의 권고형량이 '11년 이상, 무기'인 점을 감안하면 가담의 정도가 경미한 피고인에 대해서까지 조직에서 역할을 분담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행위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량을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잠정적으로 현행 양형기준을 유지하되, 형법상 치상 및 치사 범죄가 있는 범죄군들(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강도, 현주건조물 방화, 상해, 폭행, 협박, 약취·유인 등)에서 양형인자를 양쪽에 공통적으로 또는 독립적으로 배치하는 방안에 관한 추후 심층적인 연구를 거쳐 통일적 규율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예를 들어 권고 형량범위의 차이가 크지 않은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치사(양형기준 책자 372쪽), 폭행치상/치사범죄(양형기준 책자 287쪽)의 경우 양쪽에 공통적인 양형인자를 적용하기도 함

#### (나) 소수 의견(4인) : **수정안 유지**

-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할 때에 이미 양형위원회에서 이에 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와 '2인 이상 공동범행'에 한하여 대유형4의 양형인자로 추가하기로 의결하였음

- 대유형1~3의 경우에는 이들 양형인자가 각각 특별가중인자와 일반가중인자로 반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에는 대유형4의 경우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제외함
- 약취·유인·인신매매 범죄는 범죄조직에 의해서 자행될 우려가 크고, 세계주의를 채택할 만큼(형법 296조의 2) 국경을 초월하여 범죄조직 사이의 연계 가능성도 있으며, 실제로 국제적 언론에 의해서 그러한 범죄의 비인륜적 특성이 조명됨.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대유형4는 대유형2보다 결과반가치가 더 중하고, 약취 등 범죄군 중 가장 중한 결과반가치가 나타나는 유형이므로 양형인자를 추가할 필요성이 높음

(2) 양형인자에 대한 나머지 의견조회 결과 ⇨ **수정안 유지(의견 일치)**

① 특별가중인자인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를 수정하여 13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들까지 그 범위를 확장할지 여부

- 기본범죄인 약취·유인죄 자체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므로(형법 287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할 경우 권고 형량범위가 지나치게 가중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 현재와 같이 13세 미만 피해자로 한정함이 타당함

② 대유형1의 특별감경인자인 ‘양육권이 없는 부모나 친족의 범행으로서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삭제할지 여부

- 종전 일반감경인자였던 ‘양육권이 없는 부모나 친족의 범행으로서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조정하는 문제에 관하여 전문위원단의 검토를 바탕으로 양형위원회에서 실제 사례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특별감경인자로 질적 구분을 변경하기로 의결함

③ 대유형4의 특별가중인자인 '반성 없음' 을 삭제할지 여부

- 양형기준은 '반성 없음'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어(양형 기준 책자 115쪽)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강간치사, 강도치사 등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다른 범죄유형에서도 동일한 요소를 특별감경인자로 삼고 있는데 약취·유인치사에 서만 이를 제외할 만한 특별한 사유를 찾기 어려움

4. 집행유예 기준

⇒ 회신 내용 없음

VII. 향후 일정

- 명예훼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방안(유형 분류) 검토
- 일시 : 2018. 8. 27.(월) 15:00~